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14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월 15일부터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11차 ASEM 정상회의 수행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NSC 참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대신에 김형석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관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 소위원회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마치고 할까요?

○위원장 심재권 예, 우선 보고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강창일 위원, 김경협 위원, 원유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8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40건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주요 심사 결과를 소관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집행 미흡 등에 대한 시정 2건, 본부 환차손 보전을 위한 대규모 이용 부적절 등에 대한 주의 17건, 연구개발비 집행방식 개선 및 연구결과 공개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15건으로 총 34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사 회통합연구원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시정 4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활사업단 운영 사업의 국회 심의절차 준수 등에 대한 주의 3건, 북한이탈 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통일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부적절한 전용 등 시정 2건,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사업의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한 주의 2건, 통일부와 대학생 통일 교육 중복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공청회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사드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지난 회의에서 사드에 관한 질의가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직후에 합동대책반을 꾸려서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몸만 빠져 나온 우리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납득은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나 지원 방식이 대단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합리성도 결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추산한 피해가 1조 5000억 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파악한 피해 금액은 7779억 원밖에 되지 않고 지원 금액은 5079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10년 된 기계 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10년 된 기계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소한 중고 가격 정도만큼이라도 피해 규모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투자했다, 30억 원을 투자했다 정부 지원을 22억 원으로 묶어 놓아, 한도로 정해 놓아 수천 개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듣고 우리 국회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어도 4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마불사가 상식이 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결정하면 속절없이 문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비회기 중이지만 우리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여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관한 공청회 문제는 일차적으로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제가……

○위원장 심재권 예.

○윤영석 위원 제가 지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5월 27일 날 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약 한 520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에서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청회를 개최하면 잘못하면 이러한 지원이 중단되는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청회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3당 간사께서 의논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윤영석 소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기금 심사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국정감사와의 연계 등 결산의 중요

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이태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결산 심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자녀학비보조수당 횡령 및 부당 수령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기관과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감사관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했고 감사원과 감사기관과 다 협의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였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셨느냐고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구체적인 건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희 국회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외교부 직원의 인성과 품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는 제가 지난번 장관님 계실 때 여쭙 본 것 중에서 통일부 예산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한국에 들어온 숫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이태규 위원 그래서 이탈주민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의 내부 정세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 봤는데 그때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형석** 일단 작년에 저희가 15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약 한 13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중에 70에서 80%가 여성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이탈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3국에서 체류할 때 국내로 입국하기 때문에 제3국에 체류할 때도 여성들이 체류하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들이 70에서 80%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각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가동률은 낮지만 실지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인원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탈북민들에 여성이 더 많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현안질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이석현 위원**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고 또 이태규 위원께서 잘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을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부차관에게 묻는 건데 이번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 PCA 재판소가 중국 측에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섬이 아니고 난사군도 그쪽이 암초들이다, 인공 섬을 만들었지만 암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그러냐? 그것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주된 취지였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이석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어도가 썰물 때 위로 드러나는 암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어도 문제에 관해서

는 그동안에 한중 간의 입장이 분명했고요, 이번 남중국해 문제 중재재판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냥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판결에 의하면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려고 하나 이것을 내가, 평소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또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꼭 어떤 특정 다른 사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 평소에는 아무 검토를 안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어도에 관한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이번의 PCA 판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는 억울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도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난감해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러니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어도는 지금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인데 양국 간에 이견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인접해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명백히 우리 EEZ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들고 나올 소지가 있지요? PCA에다가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판결한 걸 보니까 역사·전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더군요, 영유권 문제를 얘기할 때. 다만 국제재판소가 보는 관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문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제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

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리도 역사적인 권원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도 역사적인 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제시해야지요. 물증도 있고 옛날의 그런 문헌이 있고, 그런데 국제재판소 입장은 각종 판례를 보니까 역사적 문헌에 비중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여태까지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고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례와 이번 판결 결과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잘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번 난사군도 판결이 우리한테 불리한 면도 그런 점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1시에 국회 앞에서 입주기업 협력업체들이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까도 원혜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금액과 관련해서 고정자산과 또 유동자산 관련된 부분인데 유동자산 원부자재 피해는 지금 신고액이 약 2317억이 되어 있고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인정한 금액은 1917억이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그런데 왜 그 보상을 1200억, 1214억, 그래서 약 70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지금 입주기업들은, 특히 원부자재는 원부자재를

하청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 업체들에 또 종업원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협력업체가 한 5600개, 거기에 고용된 인원 한 4~5만 명이 제대로, 평가대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액수는 700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부가 5000억 원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고 있기에 정부가 눈치를 보고, 통일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을 간단하게 좀……

○**통일부차관 김형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서 기업들 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의 100%인데 그중에 한 10~20%가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하다 보면 한정,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성공단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업과 영업기업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업체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결국 협력업체의 그런 피해 부분은 기업들의 유동자산 형태로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피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입주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입주기업이 소위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졌느냐 하면 소위 유동자산이라는 게 원부자재고 완제품인데 그것은 기존의 저희 제도에 보면 교역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역보험이 전체 대상 금액의 70%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역보험을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직접 해 주실 것은 없지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유동자산 부분을 평가, 정부가 평가한 1917억 보상을 제대로 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할 텐데 왜 700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자기들 피해금액은 2300억이지만 삼일회계법인 통해서 평가한 금액이 19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평가한 금액이라도 좀 해 나오, 그러면 협력업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차이 700억 때문에 지금 일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통일부장관께 보험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관께서 워낙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차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이 들어가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경험보험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둘 다 보험에 문제가 있어요. 보험제도만 잘 갖춰 놓았으면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잘 될 텐데 지금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험은 수출입은행에 1년간 한 25억 주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 아시다시피 유동자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이 업체들이 하나도 가입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개성공단은 특성상 거리가 짧고 그래서 원부자재를 빨리 납품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내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 신속성이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교역보험 프레임으로는 이분들의 보험가입조건이 어려워져서 가입을 안 한 겁니다. 보험을 좀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정양석 위원** 그다음에 경험보험도 마찬가지로요.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제 보험 들었다가 다시 입주하게 돼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으니까 보험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은 또 의견이 달라요.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 있었고 특히 요즘 기계는 모든 게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월 가 버리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재 보험제도로는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보험이든 교역보험이든, 더구나 교역보험은 한 업체도 가입이 안 되고 있으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방향이나 의지가 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제도, 특히 경험보험·교역보험은 그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남북간 경험을 하는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크에도 불구하고 부모울을 더 상향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보험료를 낮춘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특혜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비록 당사자들께서 만족은 못하시지만 현존하는 제도, 경험금제도를 우선 준수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 이런 점도 감안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열린 자세로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험제도는 통일부가 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들을 산자부라든가 해서 관련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시고요.

지금 피해업체 보상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많이 만나고 계세요? 어때요? 의견 접근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저도 어제 그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입니다. 경영 정상화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의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적 지원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특별대출이라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7월 초에는 베트남에서 ‘나인모드’라고 하는 개성기업이 최초로……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또 보상규모에 관한 건데 차이가 700억 나는 게 있어요. 이것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향적인 자세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상황을 보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창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등 질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하던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견개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위원회에서 윤병세 장관 상대로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와서 참, 윤 장관 있어야 되는데 차관계라도 얘기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수선, 옷 사러 간 것.

첫째, 그 시간에 알고서 옷 사러 갔으면 한심한 것이다, 두 번째 발표사실을 모르고 옷 사러 갔으면 완전히 배제되었다, 세 번째 그날 답변 태도를 봐도 우물우물우물 하더라고. 정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무언의 항의나 무언의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아니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우물우물 하기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회고록 쓸 때 정확히 밝히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모 언론에 외교부에서 반대했다고 이런 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반대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외교부 대변인이……

○**강창일 위원** 당연히 그런 것 내야지요. 한 정부 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객관적 정황은 외교부에서 반대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반대했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 부분은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강창일 위원** 어허, 그것 나중에 다 밝혀져. 다 밝혀집니다. 반대했어요, 당신네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반대하지 않았으면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부서야.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런저런 고려를 다 했습니다만 결론은……

○**강창일 위원** 얘기해 드릴까요?

외교부가 말이지요. 외교가 버텨온 게…… 내가 옛날부터, 2년 전부터 강통외교라 그랬어요. 한일 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미국 관계는 그대로, 중국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 놔서 그래도 외교부에 박수를 쳐줬고 국민들도 기대했고 최장수 장관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 짱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북핵 문제도 중국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북핵

누를까, 이게 대 외교전략이었지요. 이것도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외교부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빨리 사표내세요. 장관 보고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더라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한중 관계는……

○강창일 위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한중 관계가 이번 문제로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창일 위원 잘 들어보세요. 외교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사표 내는 게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식의 무언의 항의가 아니고 옷 사러 갔다면 업무 중에 간 것 등등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물러서야 돼요. 이래도 물러서야 되고 저래도 물러서야 돼요. 그게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님,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못 부릅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여기 부를 수 있지 않아요? 못 부릅니까?

○위원장 심재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관진 수석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김관진 수석한테, 다 나오니까, 말조심 하라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뭐라고 했더라? 주권 침해, 주권침해 운운하고 있어? 이렇게 중국을 약 올려야 됩니까? 중국은 국가,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런데 '우리의 주권의 문제인데 중국이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래서 한중관계를 어찌 해 나가려고 그래요. 점잖게 있든지, 말을 조심해야지, 이 나라 안보·외교 다 책임지고 있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볼 때는 국방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외교라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반대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었고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차관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일 위원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실을 말해. 아니, 귀하가 NSC에 가지도 않았는데……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니, 제가 외교차관인데 왜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아니, 차관님은 NSC에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가끔씩 참석합니다.

○강창일 위원 가끔씩 참석하면, 자료는 국가안보 문제니까 자료 제출 못 하겠지요? 그건 역사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역사에 넘겨야 될 문제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외교부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독도 문제 말이지요, 독도 영유권 문제.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 놓지 마세요. 각 부처에서 지금 독도 유인도화 하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자꾸 훼방을 놔 가지고 지금 스톱돼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외교부가 왜 훼방을 놓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신중히, 모든 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신중 신중 하다가 10년 지나고, 신중 신중 하면서 계속 막고 막고 막고, 방과제 만드는 것도 막고 막고 했잖아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유인도화,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일본 눈치 보면서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자꾸 훼방 놓지 마시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일본 눈치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요. 독도 영유권, 유인도화 문제, 강화 문제, 이 문제 훼방 놓지 않겠다고 아까 했지요, 그렇지요? 놓으면 안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창일 위원 있을 없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보상이 정말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한 수혈로서 그분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통일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든 일자리든 다방면에서 이중구조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별사안에 들어가면 이 또한 입주기업과 그보다 더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 도산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 어떻다, 그대로 대입시켜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조금 전에 정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703억 추가지원,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었고, 좀 미흡하지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지원방향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데요. 그 미흡한 걸 충족시켜 주면 안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일단은 경험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북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보험제도의 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남북관계나 남북 경험의 안정적 추진에 좋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했다는 대원칙에 비춰봐서 하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45%, 7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미흡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통도 하면서 최소한 재정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대원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사례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주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한 하나의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김도읍 위원** 그렇다 그러면 대원칙 운운하지 말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통일부차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기회를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줬으면 하고요.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김도읍 위원** 이어도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 어디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리한테 제일 가깝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마라도에서는 149km, 중국 톈다오에서는 247km,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276km……

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PCA 재판소에서 중국이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어도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치밀하게 대외적 홍보활동도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이어도 학명이 뭔지 압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학명이요?

○**김도읍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발견했다고 그래 가지고 ‘소코트라 록’이라고 그러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은 여러 가지 별칭이, 독도에 대해서도 ‘리앙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이런 이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어도를 소코트라 록으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학술지든 어디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름을 이어도로 좀 치밀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 외교부 라인이 아주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유사시에는 독도와 이어도를 무난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외교부 차관에게 질의하겠는데 정부에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경제부서도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외교부의 입장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드 배치의 문제를 놓고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식이예요.

그래서 지난번, 엇그저께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외교부가 사드 배치 반대했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요. 적어도 외교부 입장이라면 사드 배치가 안 맞다, 반대하는 게 상식이지요. 그것 아니고 외교부가 왜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 차원에서 맞다 생각했고.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사드 배치 발표하는 그 순간에 백화점을 들렀다라는 그걸 처음에는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일종의 사보타지였다, 반대하는 데 대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얘기 들어 보자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닙니다.

○설훈 위원 이야기를, 가만 계세요.

그래서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따질 일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외교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찬성입니다.

○설훈 위원 계속해서 찬성이라는 주장을 계속 했어요, 정부 내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물론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려 요인들을 다 종합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결론에 대해서 반대……

○설훈 위원 내부 논의 과정에서 반대도 한마디도 안 했던 말입니까? 다 계속 찬성했다는 말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일관되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 안위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훈 위원 잠깐만. 그러면 한겨레신문이 심각한 오보를 냈는데 오보 냈다고 정정보구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하여간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상식적으로 그 정도 큰 내용으로 오보를 냈다면 대한민국정부 입장에서, 외교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제소를 하든지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설훈 위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보고 받은 상황이라서……

○설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진실게임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 진실게임의 책임은 외교부가 지게 돼요.

본 위원은 상식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반대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하는 게 맞아요.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정부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옳은 자세가 아니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잘 했는데 왜 그럴 자꾸 감추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외교부 본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당당하게 맞아요. 그걸 굳이 대통령 기호에 맞게끔, 대통령 입맛에 맞게끔,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전략적으로 잘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이런저런 측면을 검토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과 반대했다는 것과는 그것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차관,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만 계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만 계시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게 되고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데는 겁니다.

○설훈 위원 가만 계시라니까.

그래서요……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설훈 위원님 잠깐만. 차관께서는,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만약 정부 측 의견으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 말씀 끝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설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15일 날 개최되는 몽골 ASEM 정상회의, 여기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직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ASEM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가 뭔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구체적으로 제가 타이틀을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 강화에 관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중 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된 외교라면 당연히 한중 정상회의 준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하고의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자연스럽게 회동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경협 위원 물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할 텐데, 만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중 관계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외교부에서 당연히 판단할 거고 결국은 이 ASEM 정상회의라고 하는 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를 안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다자 정상회담에서 그 일정은 서로 다 얽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상당한 시한을 두고 일정 주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김경협 위원 ASEM 정상회의,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의 정상회담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양자 정상회담이…… 제가 지금 정확한 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오늘 출국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양자 별도 정상회담이……

○김경협 위원 외교부가 지금 이런 정도를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ASEM 정상회의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정말 아예 이제 외교를 포기한 건가요? 외교를 아예 지금……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베트남하고 라오스, 제가 나라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베트남하고 라오스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ASEM 정상회의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 이게 실제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안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외교적인 마찰을 줄여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요. 정말 외교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닉 상태, 외교부의 패닉 상태입니까?

그리고 26일 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있지요, 라오스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김경협 위원 여기에 아세안 10개국과 6자회담 당사자국, 한·미·일·북·중·러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하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김경협 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또 남중국해 분쟁 문제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는 자리고 북한과도 여기서 직접 대면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이 회의 분위기가?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마도 남중국해 문제가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공조 문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 될 것으로 압니다.

○김경협 위원 북핵 관련된 외교,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 안보리 차원에서의 논의에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북한의 2차 SLBM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규탄성명 추진하고 있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규탄성명 초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초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 초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초안은 어느 나라가 준비를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선 안보리 이사국들이 주동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초안을 마련해서 관련국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우리가 만든 초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우리가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국과 협의해서 초안 작성 과정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초안은 지금 어느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미국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 초안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전달이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김경협 위원 여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 본부 입장을 대기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김경협 위원 이게 SLBM 1차 실험 때는 그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김경협 위원 중국·러시아 반대 입장이 명확했고 바로 규탄성명이 나왔었고. 지금 이게 중국·러시아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북핵·북미사일 공조체제가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중국·러시아 외에 나머지 이사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6자회담 5개 당사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윤 장관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 국제사회 전체의 구도라는 게 확고히 정착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우리가 사드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작 해결해야 될 북핵 문제, SLBM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돼 가고 있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지난 11일 회의 때 사드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더 이어서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일단 북한에서 포병국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경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자체가 북한의 핵이라든

지 그런 위협에 대한 거니까 북한의 그 경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관련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과 함께 북한의 어떤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약화·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년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전탐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하여튼 북한의 이런 무력 대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협력자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그 나라들도 반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제가 설명드리기는,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관련 해당 국가하고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런 사드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기된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관련국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 차관께서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에서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한 어떤 대응 협력을 위한 노력을, 작업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현재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국제사회에서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원혜영 위원 그건 큰 틀에서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 물리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이를 테면 대중국·대러시아 관계에서 한 바가 있나 이거지요.

한 바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하고 지금……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것에 대해 우려 표명을 해 온 적은 있지요. 북한도 반발하고 있다라는 말을,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런 반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원혜영 위원 글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북한의 물리적 도발, 대응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여지가 우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공조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원혜영 위원 사드 배치 최종 결론이 언제 냈냐, 이것 갖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맞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최종 토론해서 결론이 난 날은 그날이 맞습니다.

○원혜영 위원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나 있고 7일 회의에는 발표일정만 결정한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배치 여부까지 다 여기서 결정되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6월 말까지는 군사적인 효용성과 부지의 가용성에 관한 확인 작업이 있었고요, 7월 초에 발표 문제를 협의해서 7월 7일 날 결정이 된 겁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7일 날 발표 일정은 확정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날 결론을 내려서 그다음에 발표를 한 거지요.

○원혜영 위원 발표 일정이 여기서 확정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요.

○원혜영 위원 그렇다면 그 발표 시점에 외교부장관이 다른 일을 본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관께서 지난 월요일 날 회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요. 주말도 그렇고 그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걸 모르고 그랬다는 건……

○원혜영 위원 글썄, 그 시간이라는 게 이 중대한……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발표가 있고 장관이 뭘 해야 될지는 일정이 다 잡혀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빈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을 활용한 겁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그 빈 시간이 하필 발표하는 시간일 수 있냐 하는 거지요. 7일 날 발표 일시가 정해졌다면 그렇게 안 맞는 행동은 없지 않았겠냐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발표는 국방부에서 하더라도 외교부가 취할 조치는 또 시간대가 다르게 사전에 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원혜영 위원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7일 날 NSC 회의에 외교부장관이 참석한 게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도 참석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원혜영 위원 확실히 참석……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구체적인……

○원혜영 위원 요전에 장관 답변 얘기 들으니까 ‘중요한 회의는 참석합니다’ 이렇게 일반론으로 얘기를 했는데 7일 날 NSC 회의에 참석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NSC 상임위원회 멤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원혜영 위원 7일 날 참석한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회의는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NSC라는 게 관례적으로 언제 했고 그다음에 장소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사드 도입의 이유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치가 사드 도입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이유라는 것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유일한 이유라고 보는지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이유입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치라는 우리의 입장이 유일한 이유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없으면 있을 이유가, 배치할 일이 없다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내지는 완화가 되면 사드는 철수시키는 것이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 철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적 귀결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 문제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풀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케리 국무장관도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사드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구적 배치인가 한시적·탄력적 배치인가 하는 문제, 또 배치 지역이 성주로 발표됐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배치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 정리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차관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혜영 위원 그래도 이게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미국과의 문제니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물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 문제, 영구적 배치나 한시적 배치나 문제, 배치 지역 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된 내용 이런 것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이 사드 배치가 전적으로 군사적인 문제다,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까지 모든 논의의 결정 과정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원혜영 위원 더 논란은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영구적 배치나 한시적 배치나 또 배치 지역의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서 미국과 이 부분이 확실히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지금 이인영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차관님, 사드 배치 문제의 전과 사드 배치 결정 후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인식,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평가하시거나 안이하게 판단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중 관계가 이런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대답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인영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고 중국 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한국을

몰아치거나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이라든가 대국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반면에 중국에서 여론조사 한 것의 88%가 ‘한국의 제재를 지지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다섯 가지 대응조치가 건의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건 ‘환구시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환구시보’가 어떤 신문인지는 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압니다.

그리고 심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한중 관계가 이런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지난 3년간 쌓아 온 신뢰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자산인데……

○이인영 위원 바로 그 얘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바로 지난 3년 동안 쌓아 온 그 신뢰의 문제들에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큰 균열을 일으키거나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외교부는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대처하셔야지 정당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입장, 어떤 행동을 취해 왔습니까, 최근 3~4일 사이에?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하고 전달되어 온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지금 국회에서 답변드린 그런 정부의 기본 입장을 얘기했고 김장수 주중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중국 쪽에서도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까지 판단은 하지 않고요. 국방부 관련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여기가 외교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질의 과정에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넘기셨기 때문에 저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것도 이런저런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이인영 위원 이것도 경제부처로 넘기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아니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얘기를 자꾸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과 그것을 국회나 언론에서 자꾸 거론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게끔 마치 인바이트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좋은 전략·전술적 태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제재 혹은 보복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됐던 것이고, 우리가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앞서서 선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들은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정부 내부에서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얘기를 했잖아

요. 그것도 좋은 전략·전술적 태도일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그것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치가 결정되고 나온 이후에 언론에서 제일 먼저 중국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느냐 말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당연히 결정 과정에서도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도 검토가 있었고요. 또 경제부처하고도 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은 뭐 외교부에 직접적인 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그러면 외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위원님들 그게 센카쿠입니까, 다오위다오입니까? 우리가 둘 다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PCA에서 판결 나온 이후에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드 문제가 온 다음에 다시 센카쿠열도 내지는 다오위다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불붙는 데다가 석유, 휘발유 이런 것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왔다가 순식간에 지난 3년, 4년 동안 공들인 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인화성이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어도나 독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한중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전략적으로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에 외교적 관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어저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요. 그 부분은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마련된 성명 문안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 핵심이 뭐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는 저희들도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지역이고 또 수입 물동량의 45%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님과 외교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 인사들이 적절한 계기마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확립된 국제적인 행동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했고요.

○**이인영 위원** 저는 단순히 외교적 사안을 넘어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중, 중미, 한미, 이런 역관계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부가 정말 잘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드 문제로 온 한중 간의 갈등·균열의 조짐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 텐데 우선 하나는 사드 문제가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 공조해 왔던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데…… 아니면 별개 다 이렇게 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일단 결정할 때 있어서는 이것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북제재 공조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당당하게 우리 자주권·자위권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게 저희들 정부의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북 공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국제사회 전체의 대립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면서 중국, 러시아와 그동안까지 해 왔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반복적인 대답이시고, 제가 지금 다시 조금 더 진전된 질문을 할 테니까 진전된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는데……

북핵과 관련해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사드가 군사적인 대응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

하자면, 비핵화 과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취했던 외교적·경제적 제재, 압박 이런 공조에서는 큰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국과의……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중국도 여러 계기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인영 위원** 아니, 차관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명백하게 대북 공조와 관련해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개연성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북핵 불용 원칙은 확고하고 시진핑 주석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이인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 문을 닫아서, 북을 힘들게 해서 그 핵을 없애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부분들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북에 경제적인 문을 닫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공조까지로 이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평도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균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똑같은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외교부의 자기 말의 모순 이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공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저는 전체 큰 틀과 전체 대국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조그마

한 세세한……

○이인영 위원 중국의 입장에서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텐데요? 사드의 문제가 중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물론 그런 측면을 저희가 헤쳐 나가야 될……

○이인영 위원 미국이 대중 포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판단한 순간 중국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이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기 말의 일관성, 모순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정한 것이고요. 일단 결정을 내려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모든 관계 부처와 정치권과 또 국민들이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차관님도 계시니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왔기 때문에 이 뒤에 남사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외교부한테 공동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핵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세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보셔야 지금 한중 갈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핵이나 사드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 다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발전시키는 비중을 높여서 거기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긴장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되돌리는 것인데요,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정세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전반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국가 전략들을 검토해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보겠는데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게 헌법 60조제1항에 딱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SOFA 협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SOFA가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이인영 위원 SOFA가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이인영 위원 SOFA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건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회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례들을 즉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방부장관께서도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작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법제처장도 어제 관련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호방위 조약이든 아니면 SOFA 등등 또 다른 것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기본적으로 헌법상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들,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들을 죽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말씀 또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대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입니다.

짧게, 위원장님 지시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정양석 위원 남중국해 PCA 판결 재판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재판 참관에도 대한민국이 참가하지 않고 이번에도 정말 해석이 어려울 정도의 외교부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고민·고심 입장을 잘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다 배려하는 고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입장들을 보고 언론은 외교부의 입장을 ‘전략적 모호성이다’ 신문에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가 그래서 모호하면 모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입장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리가 뭐냐, 우리는.

그래서 학자들은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중국의 위치나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많이 배려한다,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배려하고 정말 외교적 표현을 고심해서 하는데 중국은 도대체 우리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심 끝에 선택한 이런 길에 대해서 중국 측하고 물밑대화나 또 우리 이런 태도에 대해서 중국 측의 답변 이런 건 없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

국, 중국 또 관련국들과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고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안별로 저희들이 잘 대응할 경우에 관련국으로부터 공히 평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AIB 가입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눈치 보다가 실기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입니다마는 사실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으로부터도 평가를 받았고 미국으로부터도 평가를 받은 그런 결정이었습시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기 때문에……

○정양석 위원 하여튼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실리 또 우리의 절제된 표현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 변화들이 얻어내는 실리외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정양석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NSC에 장관님이 안 계시면 차관님들이 대신 들어가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어떻습니까? NSC가 토론문화가 편합니까, 아니면 부처별로 자기 파트만 이야기 하는가요, 아니면 정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편하게 논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하여간 제 경우로 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양석 위원 아까 차관님 답변 들으니까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다’ 이렇게…… 물론 집행부서는 칸막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NSC가 정말 치밀함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전에도 제가 장관께 사드 배치 문제는 발표만 언제 하느냐에 남았지, 이미 1년 전인가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면 NSC가 열렸을 때 부처별로 역할 분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반대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배치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가 잘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개 이런 식이 아니겠어요? 발표가 되고 나면 액션하겠다, 그러면 나는 너무 늦다고 봐요. 그래서 발표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설득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외교부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또 예상되는 문제는 할 텐데, 조금 민망합니다.

8개 도시가 거론되었어요. 처음에 중부권이 됐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수도방위는 PAC-3로 한다, 패트리엇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랬던 말입니다. 거론되는 지역마다 전부 단체장들이 삭발하고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국방부가 기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다루지만 국방부가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NSC가 예견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논의해서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좀 했는지…… 정말 중국과 러시아는 예견된 그대로 반대 표시하고, 도대체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흔적도 없어진 것 같고, 국내는 국내대로 8개 도시마다 모두 국론이 분열되고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됐던 말입니다.

외교부차관님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걸 당연히 NSC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발표 시점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다가 선제적 조치들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NSC가 앞으로 더 큰, 국방부장관 말대로 일개 포병대대에 지나지 않는 다라고 결국 그렇게 방향이 또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를 NSC가 정말 신뢰감 있고 치밀하게 처리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시정해 가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부처별로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NSC에 참석하는 모든 멤버들이 국가 전체의 문제를 보고 또 이렇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판단하고 집행되는 신뢰감 가는 기관이 되고 또 두 분, 외교부나 통일부도 참석하시면 그렇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사 하나 읽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오늘 신문에 난 칼럼인데요.

중국 관영매체의 한국특파원은 ‘사드배치를 한국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1년이 넘게 시간만 끌었을 뿐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국내의 언론인들과 의견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 역할을 다했는지 한번 반성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위원장 심재권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질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질의와 의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연거푸 질문을 하는 것은 외교부 설명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장관께서는 계단 올라가다가 바지가 터져서 그것 수선하러 백화점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의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데가 수선집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양복과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단별 신사입니까? 양복이 터졌으면 다른 양복으로 갈아입고 사드 배치 발표할 때 책상에 앉아야지요, 가족이 가서 수선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깐 자꾸 되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요, 엇박자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방침을 결정했는데 부처 간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엇박자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방침을 정하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르니까. NSC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일사불란하게 처음부터 다 의견이 사드 배치로 똑같았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민주적인 토론 하는 곳이 아니지요. 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좀 모순돼요. 양복점 얘기하고 처음부터 의견이 똑같았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구태여 그런 부분은, 민주국가에서 의견이 달랐으면 ‘이렇게 이렇게 달랐는데 정부가 방침을 이렇게 정했으므로 우리는 이의 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 국민이 볼 때는 더 소망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기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양복 문제는, 뒷부분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외교부 측면에서 검토한 의견들의 개진이 자유롭게 됐고 그런 토의를 거쳐서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고요,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복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장관께서 얘기하신 시간이 없어서 짧이 그때밖에 안 났다는 말은 진실이고요,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같이 모시고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쪼개 놓은 시간을 찾은 것이 그거라서……

○**이석현 위원** 차관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단벌 신사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양복이 몇 개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이 가서 수선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제가 아는 한 검은 양복이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이석현 위원** 저 같이, 장관 아닌 저도 지금 옷이 한 다섯 벌은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한 벌밖에 없으면 옷 한 벌 보내 줄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실이 그렇습니다.

양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에스트로 나도 가 봤어요. 양복을 사면 맞게 줄여 주기는 해요, 한 이삼 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거기가 수선하러 터진 바지 가지고 수선집으로…… 수선집은 다른 데 있어요, 백화점 안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왜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관련해서 외교부가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태도나 기조를 보면 정부 내에 외교부의 위상과 역할이 정말 뭔가?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 내에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부처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이태규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 내에도 매과와 비둘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효용성을 주장하는 부처가 있다면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우려하는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와 전자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협의 과정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또 정부고.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들까지 부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 어떤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는 외교부의 자세를 보면서 과연 외교부가 그러면, 결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대외전략의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 기조를 정하고? 그런 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회의 때 다른 위원님께서 NSC가 언제 열려서 결정했냐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관례상 밝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넘어가는데,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7일 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장관은 ‘그 부분은 관례상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장관은 와서 ‘7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외교부는 도대체 뭐냐?

또 제가 그날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것이 만약에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서 진
전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사드 배치는 다
시 철회하는 거냐? 그랬더니 답변을 또 안 하시
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
은 와서 ‘그렇게 되면 철수한다’ 이렇게 또 답변
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에
다 대고 이야기하는 건데 외교부장관은 그 부분
에서 얼버무리고 답변을 안 하시고 국방부장관
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그
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국회가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이후에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국회가
지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믿고 지원할 수 있
겠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
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
리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제가 답변드려도 되
겠습니까?

○이태규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사드 배치에 대해 외
교부가 반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 이
게 반대도 사안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
치 문제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것과 사드 배치라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될 사안에 대해서 사
안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은 저
희들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
했습니다마는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큰 결정에 있
어서 외교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핵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은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제가 윤 장관의 답변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
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 것
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
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에서 뉘앙스가 좀 다른 얘기를 하
셨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답변
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규 위원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 명
확하게 답변해야지만 국민들도 이해하기 훨씬 편
하신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외교 문제가 그렇게
꽤도 난마처럼 아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 모든 부분이 외교 관련된 부
분인데 그러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그러한
부분에 전혀 감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부가 조정을
하시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부는 계속
해서 뭔가를 얼버무리고 답변 안 하시려는 쪽으
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지금 외
교부가 갖고 있는 속내를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다른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고 다른 어떤 부처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그렇지 않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
지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
에서 외교부가 뭔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런 답변
태도나 기조를 유지하시면 외교정책이나 전략
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든 제도든 간에 지
원할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외교관은 답변에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신중한 것하고 애매모
호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
가 소신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
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후에 어차피 사드 문제, 지금 남중국해
니 사드니 북핵이니 삼각 화두에 갇혀 있다, 이
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올
해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통해서 토론해 나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나갈 텐데 그런 쪽
에서 저는 외교부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어

면 태도나 기조 이런 부분에서 큰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의견 개진을 한 차례 모두들 해 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상근이사 나와 계시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상근이사 박중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잠깐 여기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지금 통일부의 퇴직 간부들이 보니까 주로 북한이탈주민재단으로 계속 2010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8명이 1급 또는 2급으로 낙하산으로 죽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려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간부를 해고를 시키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상근이사 박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해고를 시켰지요? 그리고 해고를 시켰는데 그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전부 다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상근이사 박중윤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복직은 안 시키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시간을 끌겠다는 건데 이게 판정서를 좀 봤더니 전혀 해고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억지 해고다, 거의 이런 판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고를 시키고 또 통일부의 퇴직 간부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해고를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상근이사 박중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저희 재단의 생활안정부장으로서 개방직 3 플러스 2로 5인을 다 마친 상태에서 평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임이 됐고요.

○김경협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통일부에

서, 해고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상근이사 박중윤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구먼? ‘그렇게 통일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소송도 통일부에서 또 하라고 했구먼, 예?

통일부차관님!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김경협 위원 무슨 하나재단이 통일부 퇴직 간부 노후보장 재단입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뭐니까?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퇴직 직원 자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당하게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죽 보니까, 그 자료들을 봤더니 통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입을 했고, 누가 개입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세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계속 개입했던 과정들이 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고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해고시킨 자리에 또 통일부 퇴직 간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지금 해고시킨 간부도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전문가고 베테랑인데 보니까 해고의 사유가 없어요.

또 문제는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복직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골탕을 먹이겠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내막을……

○통일부차관 김형석 예, 자세한 것은……

○김경협 위원 차관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

의와 의견 개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심재권** 말씀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주 험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 자극적인 얘기를. ‘자위적 조치에 간섭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뭐라고 했더라? ‘중국 당국의 도를 넘어선 발언에 분노한다’ 등등등등.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 박근혜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중국의 힘을 빌려서 북핵, 한반도 비핵화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북핵 문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 내지 수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알아보더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으면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김관진 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과 상의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내부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김관진 실장을 여기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아까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야 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3당 간사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결산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개진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부의 업무 수행 및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통일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되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회 전에 결산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윤영석 간사님, 김경협 간사님, 이태규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심층적인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님들과 오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개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PCA 결정에 따른 우리 준비사항은 없는지 또 개성공단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일들은 없는지 또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금강산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의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금강산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출석 문제에 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점 또한 3당 간사님들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결정에 대한 여러 의견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누누이 저는 사드 결정이 우리 군사적인 효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손상하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 과정으로 옮겨와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만이 현재의 우리 외교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60조는 명백히 이런 국가적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참으로 지금 총체적인 외교 난국을 맞고 있다는 우려가 들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이 문제를 비준 과정으로 논의하는 것만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제2차관, 김형석 차관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창일	김경협	김도읍	김무성
문희상	설훈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윤영석	이석현	정양석
이인영	이태규	추혜선	

○청가 위원(4인)

박병석	윤상현	이주영	최경환
-----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조태열		
조정기획관	이현		
원자력안전외교기획관	함상욱		
아프리카중동국장	권희석		
개발협력국장	이용수		
양자경제외교국장	천준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인식		
전략기획이사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		
경영총괄이사	김광근		
교류협력이사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철기		
기획이사	최동준		
사업이사	김영근		
통일부			

차	관	김	형	석
기	획	최	보	선
조	정	이	덕	행
실	책	임	병	철
장	협	김	남	중
통	력	이	상	민
일	지	이	무	일
정	구	이	금	순
책	화			
협	학	권	태	오
력	단	김	안	나
지	장	김	점	준
구	남	진	난	경
화	북	박	중	윤
학	협			
단	력	남	근	우
장	지			
남	원			
북	실			
협	장			
회				
원				
협				
회				
지				
원				
실				
장				